

불평등 완화의 정치경제 :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

최유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Mitigation : Experiences of Netherlands and Denmark

Youseok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herlands and Denmark lowere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at a period in time when income inequality in the world was deepe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and trend of income inequality in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pared to those in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Using the method of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identifies which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inequality in these countries. It also explores which labor market policies mitigated inequality in these two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reduction in earned income inequality in the Netherlands is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through the increase in voluntary part-time working. In particular, the policies designed to promote equal treatment between full-time and non-regular workers contribute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art-time work.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Denmark improved the proficiency of low skilled and low-wage workers, thereby alleviating the wage gap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worker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Netherlands and Denmark, this study discusses policy direction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in Korea.

Keywords : Income Inequality, Labor Market, Decomposition of Income, Flexicurity, Netherlands, Denmark

1. 서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는 회복세에

있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1].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은 소득계층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폭은 고소득층에 비해 낮았다.

이 논문은 2017년 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6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609-004),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NRF-2016S1A5A2A03926989)이다.

*Corresponding Author : Youseok Choi(Hallym University)

Tel: +82-33-248-1777 email: yschoi@hallym.ac.kr

Received October 31, 2017

Revised November 24,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2007-2012년 기간 동안 OECD 35개 국가에서 상위 10% 집단은 2.3%의 임금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하위 10% 집단은 1.1% 증가에 그쳤다[1].

이러한 소득계층별 임금 증가율의 격차는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 수십 년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지만, 각국마다 불평등 심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불평등 심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2].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을 통해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할 수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수준과 심화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을 살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불평등은 개인, 가구 수준의 근로소득 불평등이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주로 가구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3-5]. 근로소득, 자본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공적, 사적 이전을 가감한 최종적인 가처분 소득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의 1차적인 분배의 양상이 어떠한지, 노동시장에서의 분배와 직결된 노동시장정책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소득 불평등은 개인과 가구 수준의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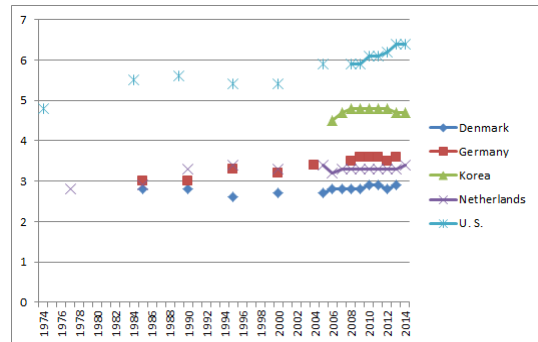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의 양상은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재분배 정책의 재정 규모와 타겟집단의 구성은 가처분 소득 기준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지국가 제도를 통한 상당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인 분배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탐색을 다소 등한시한 결과를 가

져왔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의 변화양상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데 주목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핵심 영역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의 양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이다. 이 국가들의 불평등 정도와 관련된 요인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한국, 스웨덴, 미국, 독일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간단한 시계열 분석과 불평등 변화 요인분해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를 모두 다룰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여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2. 소득 불평등 변화와 요인분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각국은 향상된 노동시장 성과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1].



Source: OECD[6]

Fig. 1. Household Disposable Income P90/10

Fig. 1은 1974-2014년 약 40여년 동안 가구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10분위 대비 상위 10분위의 소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불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의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OECD[5]에서 제시한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단계별 분해를 통해 각국에서 불평등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Table 1은 근로소득 불평등의 구성과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3-5].

Table 1. Types of Income Inequality and Related Factors

Unit of Analysis	Types of Income Inequality	Related Factors
Individuals	Earning Inequality of Workers	Wage Rate, Working Hour, Working Period
	Earning Inequality of Working-aged People	Employment Rate
Households	Household Earning Inequality	Household Structures, Employment Rate of Spouses, Assortative Mating,

Source: B. H. Lee[3], J. Y. Chang, B. H. Lee[4], OECD[5]

개인 수준의 근로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근로소득 불평등과 직결된 요인과 각종 구성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3-5].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은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증감으로 인해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불평등 수준에 변화가 발생한다.

또 다른 요인은 구성효과인데, 근로소득의 핵심요소와 관련된 인구 구성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점이 근로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시간당 임금에 변화가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전체 근로자 간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구성효과는 근로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의 변수에서 특정 집단의 분포의 변화가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일종의 인구조학적 설명방식이다.

OECD[5]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구성효과 중에서 취업자와 비취업자 구성 변화에 주목하였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의 변화를 분석한 후, 취업률 변화에 따라 개인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 단위가 개인에서 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불평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생겨난다. 가구별로 소득을 집계할 경우, 가구내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 해당 가구원의 가구소득, 1인 가구 분포의 변화 등 가구의 다양한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한 가구의 경우, 결혼상태자로 유사한 소득 수준을 갖는 동류혼(assortative mating)의 정도가 소득수준 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동류혼 경향이 상류층 가구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가구 수준으로 집계된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과거에 비해 가구 수준의 소득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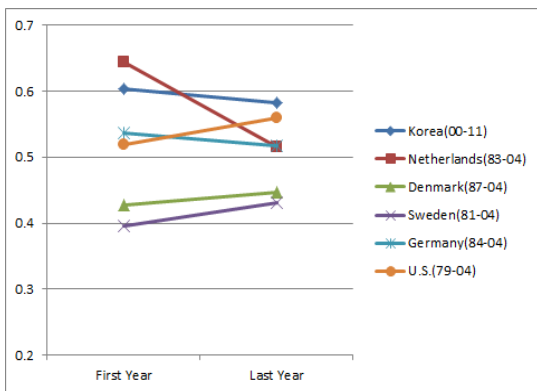
OECD[5]에서는 가구 수준의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남성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동류혼, 가족구조 등의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고 있다. 남성의 근로소득이 가구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남성 근로소득을 먼저 투입하고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동류혼, 가족구조 순으로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해당 요인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 요인분해 방법은 반사실적 가정(counterfactual assumption)에 기반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두 시점 사이에 특정 요인의 변화가 없었다 라면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7,8].

다음 절에서는 OECD[5], 이병희[3] 등이 단계별로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수준과 변화를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비취업자를 포함해서 분석하였다[3,5]. 또한 가구로 분석 수준을 변경하여 가구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독일에 관한 자료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의 수준과 관련 요인의 변화를 추적하였다[5].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병희[3]가 가구소비실태조사(200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였다.

3. 소득 불평등 변화 추이와 관련 요인

3.1 개인 근로소득 변화와 관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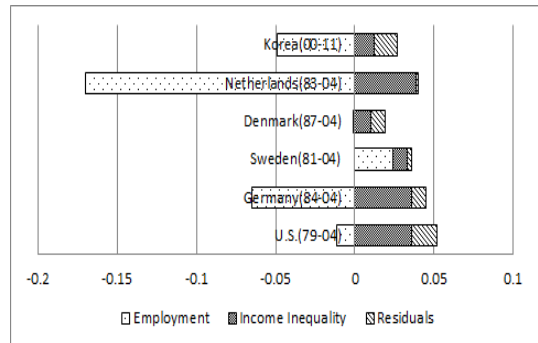
Fig. 2는 개인 수준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의 근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집계한 지니계수는 이후에 살펴볼 가구 수준에서 집계한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의 조사 기간이 국가 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대상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국가별로 엄밀한 비교를 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각각 0.446, 0.431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 미국은 각각 0.582, 0.560으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미국, 스웨덴, 덴마크에서 증가한 반면, 한국,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감소하였다.



Source: B. H. Lee[3], OECD[5]

Fig. 2. Changes in Gini Coefficient of Earnings among Working-age Populations(15-64)

Fig. 3은 개인 수준의 근로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를 분해하여, 소득불균형 효과, 고용효과, 소득불균형과 고용효과를 제외한 잔여효과로 구분한 것이다. 각 효과는 지니계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지니계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저소득층의 고용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지니계수를 감소시킨다. 개별 요인들이 지니계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해당 기간 동안 각 요인들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Source: B. H. Lee[3], OECD[5]

Fig. 3. Contributions of Earning Dispersion and Employment Effects to Earning Inequality among the Working-age Population

한국은 2000-2011년 기간 동안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가 약 0.022 정도 감소했다. 취업을 증가 등 고용효과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효과가 소득불균형 증대에 따른 지니계수 증가효과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로 인해 지니계수는 0.049 감소한 반면, 소득불균형 효과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는 0.012 증가에 그쳤다. 기존의 소득이 없던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4,9,10].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가 감소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효과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가 0.17로 매우 큰 폭의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도 고용효과는 지니계수를 0.065 정도 감소시켰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큰 폭의 고용효과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시간제 근로가 해당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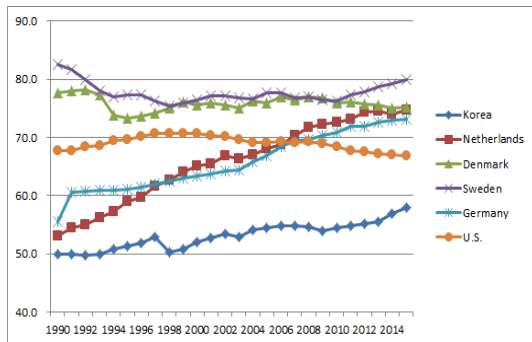
Table 2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독일은 해당 기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증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1987년 38%에서 2004년 70%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1984년 55%에서 2004년 75%로 급증하였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개인 수준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국가들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남녀가 공동으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률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고용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able 2. Gini Coefficient of Household Earnings and Employment Rates

	Netherlands		Denmark		Sweden		Germany		U.S.	
Years	87'	04'	87'	04'	81'	05'	84'	04'	96'	04'
Gini of Household Earnings	0.31	0.33	0.28	0.30	0.29	0.33	0.31	0.35	0.37	0.42
Rates of Change	6.2		7.9		16.1		14.2		14.4	
Male Employment Rates	0.81	0.86	0.89	0.86	0.94	0.89	0.9	0.87	0.82	0.87
Female Employment Rates	0.38	0.7	0.79	0.82	0.86	0.85	0.55	0.75	0.68	0.74

Source: OECD[5]

Fig. 4 는 1990-2015년 기간 동안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스웨덴이 8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도 70%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다. 반면 한국은 증가추세이지만 58%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미국에 비해서도 10%p 정도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90년에는 한국보다 조금 높은 53%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에 이르렀다. 독일의 경우, 2004년 이른바 하르츠(Hartz) 노동시장 개혁 이후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은 미니잡(Minijob) 등 여성들의 시간제 근로 참여가 증가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한 요인이 되었다.



Source: OECD[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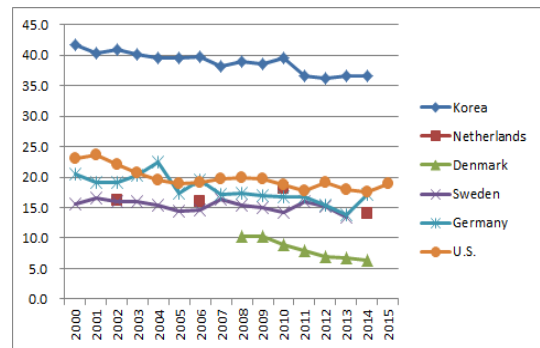
Fig. 4.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for Working-age Population(15-64)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OECD 최고의 노동시간에서 보이듯이,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야근을 일상화하는, 회사를 우선시하는 직장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부족에 따른 여성의 과중한 육아부담, 자녀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경쟁적인 교육환경 등이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높은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로 인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상도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다. Fig. 5 는 각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남성 중위소득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남녀 간 임금격차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12].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임금격차 수준은 2000년 42%에서 2015년 37%로 감소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15%에 조금 못 미치며, 덴마크는 6%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여성의 짧은 경력년수, 승진기회 차별 등을 비롯해서 여성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업종에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결혼, 출산 등 경력 단절에 따라 근속년수가 남성에 비해 짧다. 또한 관리직 등 고임금 직위, 고임금 제조업, 금융서비스 업종 등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을 낮춤으로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Source: OECD[12]

Fig. 5. Wage Gap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3.2 가구 근로소득 변화와 관련된 요인

개인 수준의 불평등 분석을 넘어서, 가구 수준의 근로 소득 불평등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가구 단위로 측정된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인 단위로 측정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5].

Table 3 은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5].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남성 근로소득 변화율, 가족구성, 동류혼 경향 등을 제시하였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수준은 해당 기간 동안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측정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02, 0.326이었다.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불평등 심화의 정도가 각각 7.9%, 6.2%로, 스웨덴, 미국,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 심화의 정도가 낮았다.

가구수준에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남성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의 변화이다. 스웨덴을 제외하고 4개 국가 모두 해당 기간 동안 하위 10% 집단의 실질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10%의 실질 근로소득은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하위 10% 집단의 연간 근로소득은 4.6% 감소한 반면, 상위 10% 집단의 연간 근로소득은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구조를 1)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2)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부, 3) 한부모 가구, 4) 독신, 기타 가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가구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국가 모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한부모, 독신, 기타 가구 유형이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한부모 가구, 독신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가구들의 증가는 가구 수준으로 측정된 근로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류혼과 소득분위별 여성고용비율의 차이도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요인이다. 고소득 근로자가 자신과 유사한 소득을 지닌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근로소득 불평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에서 동류혼 경향의 증가는 근로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분석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서 인접한 소득분위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그 비율이 46%에서 52%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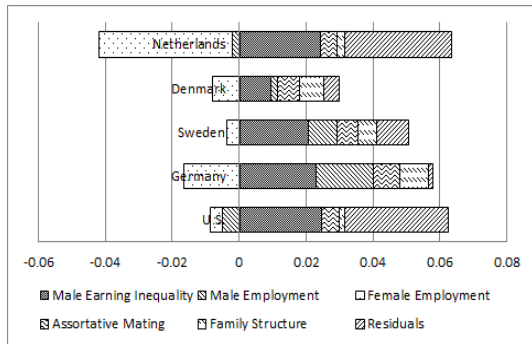
또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상위 10분위 고소득층 남성을 둔 여성의 취업률은 하위 10분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 남편을 둔 여성의 취업률이 높으며, 이들은 남편과 유사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갖기 때문에 동류혼 경향의 증가와 고소득층 여성의 높은 취업률은 가구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hold Earning Inequality

	Denmark		Netherlands		Sweden		Germany		U.S.	
	1987	2004	1987	2004	1981	2005	1984	2004	1996	2004
Gini of Household Earnings	0.28	0.302	0.307	0.326	0.285	0.331	0.309	0.353	0.367	0.42
Change Rates	7.9		6.2		16.1		14.2		14.4	
Change in Male Earnings	9.1		11.4		42.9		9.6		-1.3	
Top 10%	13.4		14.8		60		18.5		17.8	
Bottom 10%	-4.6		-32.7		12		-39.2		-3.3	
Family Stucture										
Couples with Children under 18	55.4	49	60	53.1	55.5	47.8	52.5	45.5	53.7	50.4
Couples w/o Children under 18	24.3	25.5	25.5	29.6	21.5	23.4	31.1	31.8	22	23.1
Single Parents	6.4	8.9	4.5	4.8	7.3	9.7	4.3	6.9	11.5	12.7
Single/Other Types	13.9	16.6	10	12.5	15.8	19.1	12.1	15.8	12.8	13.8
Female Employment Rates(Assortative Mating)										
Husbands Earnings in the Top Decile	0.81	0.91	0.35	0.69	0.89	0.95	0.47	0.72	0.52	0.64
Husbands Earnings in the Bottom Decile	0.68	0.78	0.33	0.65	0.8	0.82	0.63	0.79	0.69	0.71
Spuses in the Same Decile	12.3	15.1	14.3	13.9	10.4	13.7	10.6	14.6	14.2	12.4
Spouses within (+/-1) Deciles	45.6	52.2	35.5	43.9	44	50.2	36	39.4	42.4	45.5

Source: OECD[5]

Fig. 6 은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남성소득격차, 남성고용, 여성고용 등 노동시장 요인과 동류혼, 가족구조 등 인구학적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이다[5]. 전반적으로 남성소득격차, 동류혼, 가족구조 등은 가구 수준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남성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동류혼이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Source: OECD[5]

Fig. 6. Estimated Contributions of Labor Markets and Demographic Factors to Household

반면 여성고용 증가는 가구단위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였다. 남성고용의 효과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남성취업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수준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였다. 반면 독일,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남성취업률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가구수준 근로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와 같이 가구 수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요인으로 취업률 증가, 특히 여성 취업률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었을까? 다음 절에서는 그 비결을 간략하게 탐색할 것이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난 수십년 간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불평등이 심화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까?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13]. 이른바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으로 불리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네덜란드 고용창출의 기적은 여성 고용을 확대하여 전체 고용률을 증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13-18]. 여성들은 노동참여를 통해 가구소득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증가된 소득은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13,14,17].

네덜란드는 1996년 근로시간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지위를 높이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13,14,19,20]. 그 결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각종 사회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었다[13,14].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13].

네덜란드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였다[13]. 여성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13]. 여성이 자녀양육을 비롯해서 자신의 여건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네덜란드 경제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다[13,19,21].

덴마크는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유연한 노동시장, 실업자를 위한 충실한 사회보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의 긴밀한 통합에 기반한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정책을 추진하였다[13,20]. 덴마크 정부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을 위한 활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13]. 이와 동시에 유연안정성의 다른 축인 소득 안정성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병행하였다[13,20]. 강력한 활성화 정책은 높은 소득대체율의 실업급여 제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13,14].

덴마크 유연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된 고용안정이다[13]. 실업급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업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훈련에 대한 지원이 결합되었다[13]. 덴마크

정부의 교육훈련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으며, 덴마크 노동자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양질의 기술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13,20].

특히 덴마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주변부 근로자를 복지정치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면서 이들의 고용안정을 추구하였다[13,14]. 정부와 노동자 조직은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의 숙련 향상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연안정화 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다[13,20]. 덴마크의 성공비결은 정부와 노동조합이 저소득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력의 전반적인 숙련도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13,14].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노동시장 이중화 경향이 복지혜택의 이중화를 낳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화되면서 유연안정성 조합에서 안정성이 후퇴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13].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화되면서 소득계층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3]. 또한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소득이전 등 공공복지 정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1].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팽창된 재정제에 대한 감축으로 인해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 이는 저소득층에 주로 혜택을 주는 공격이전 확대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3,9,10].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을 보완한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 여성 고용은 70%에 육박하고 있다[4].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이미 한계에 봉착하였다[10].

따라서 향후에는 최저임금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처우 등 저소득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청된다[10].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증진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보이는 고학력, 중간 계층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없었던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고용효과가 클 것인지, 중상위층 기혼여성이 높은 소득을 얻음으로써 가구수준의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인지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등 중요한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전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동등처우 또는 격차해소 문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소득분배 문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보장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새 정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금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출산휴가 급여 보장,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우리사회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OECD, "Income inequality remains high in the face of weak recovery," COPE, Nov. 2016.
- [2] OECD, "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1de68a9b-en (Accessed on 26 May 2015).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 2015. DOI: <https://doi.org/10.1787/1de68a9b-en>
- [3] B. H. Lee, "Causes of growing income inequality over 2000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20(1), pp. 73-103, 2014.
- [4] J. Y. Chang, B. H. Lee, "Increasing Inequality and Policy Options",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23, pp. 71-109, 2013.
- [5]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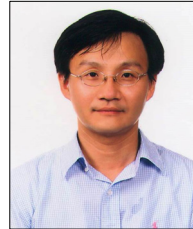
Rising, OECD Publishing, 2011.

- [6] OECD, "Income inequality (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Accessed on 05 May 2017), 2017. DOI: <https://doi.org/10.1787/459aa7f1-en>
- [7] M. C. Daly, R. G. Valletta, "Inequality and Poverty in United States: The Effects of Rising Dispersion of Men's Earnings and Changing Family Behaviour." *Economica*, 73, pp. 75-98, 2006. DOI: <https://doi.org/10.1111/j.1468-0335.2006.00449.x>
- [8] W. Chen, M. Forster, A. Llana-Nozal, "Determinants of Household Earnings Inequality: The Role of Labour Market Trends and Changing Household Structure." LIS Working Paper Series, 591, Luxembourg Income Study (LIS), 2013.
- [9] C. Lee, "Rising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Korea, 1996-2000",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31(2), pp. 1-34, 2008.
- [10] S. Kim, "The Impact of the Wives' Earnings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A Simulation-Based Decomposition", *Survey Research*, 15(1), pp. 93-122, 2014.
- [11] OEC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dicator)." doi: 10.1787/8a801325-en (Accessed on 05 May 2017), 2017. DOI: <https://doi.org/10.1787/8a801325-en>
- [12] OECD,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Accessed on 05 May 2017), 2017. DOI: <https://doi.org/10.1787/7cee77aa-en>
- [13] Y. Choi, *The Landscape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onflicts in Korea*, Hanwool, 2016.
- [14] K. Thelen,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DOI: <https://doi.org/10.1017/CBO9781107282001>
- [15] A. Hemerijck, J. Visser, "Change and Immobility: Three Decades of Policy Adjustment i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West European Politics*, 23, pp. 229-256, 2000. DOI: <https://doi.org/10.1080/01402380008425374>
- [16] B. Jung, "Transformation of Corporatism in the Period of Globalization: Cases of Germany and Netherland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44(3), pp. 197-216, 2004.
- [17] H. K. Kwon, "Diverging Continental Welfare States under Globalization: Comparison between Germany and Netherland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47(3), pp. 189-215, 2007.
- [18] Keune, Maarten, 2016. "Does Quantity Overwhelm Quality? Employment Policies in Folder Model in Netherlands", *International Labor Brief*, 14(1), pp. 18-32, 2016.
- [19] R. Wielers, "The Economy of Part-time Employment in Netherlands", *International Labor Brief*, 11(9), pp. 4-16, 2013.
- [20] H. K. Kwon, "Varieties of Strategies for Labor Market Flexibility: Comparison of U.K, Denmark, Netherland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1(3), pp. 31-60, 2007. DOI: <https://doi.org/10.18327/jias.2007.10.11.3.31>
- [21] Y. Kim, S. S. Lee, "Analysis of the Time Selective Job

Policy",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3), pp. 93-128, 2014.

최 유 석(Youseok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9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D.)
- 2009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복지정책, 복지행정, 비교복지국가, 세대관계, 소득불평등